

안보와 국제관계

진 덕 규
(이화여대 법정대 교수)

I.

지난 30여 년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조성시킨 요인 중의 하나가 사실상 안보와 국제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국과 그 뒤의 북괴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과 휴전 등의 일들이 1953년까지의 일이었다면 그 뒤에도 이러한 국제관계와 안보문제는 한국사회에 발전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이들 국제관계를 고려한다면, 1953년 이전까지의 성격이 그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이론 바 국제관계의 고착적 지속성이 그 뒤의 30여 년동안 한반도에는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관계의 영향 속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반응하고 수용하는 성격을 보여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해방 이후부터 나타났던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간 국제관계가 그 뒤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수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한 영향력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단지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서 변용되어 왔을 뿐이었다.

흔히 지난 한 세대동안 국제관계를 논의할 때 양극체제로 부터 다원체제로의 변화를 주장하고, 동서 양대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대결과정으로부터 동서 공존의 성격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서관계가 남북관계로 변모했으며 그만큼 제3 세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해졌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국제관계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그 한 가운데 자리잡아 왔다. 해방 자체가 양대진영의 국제관계에서 얻어진 결과였고 한국전쟁 자체가 동서냉전체제의 한 표출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리고 그 뒤의 「전쟁상태 속에서의 평화」라는 현상도 국제관계의 균형 위에서 이룩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야 말로 변화된 국제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전쟁상태의 성격이 종식되지 않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쟁의 지속을 뜻하는 휴전상태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전쟁상태 속에서의 평화가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II.

지난 한 세대동안 우리 사회의 국제관계는 대체로 3단계의 과정을 경과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첫번째의 단계는 1953년의 휴전 이후부터 4·19혁명이 있기까지의 기간을 들 수 있다. 전쟁 직후의 상황 속에서 북괴의 남침이 가져다 준 충격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전쟁에 대한 피해감을 잊어버리려 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전후의 사회적인 성격은 정치적 혼란에 의해서 안보체제의 강화나 국제관계의 긴밀성을 추구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특정 우방의 방위체제 속에 안주함으로써 마치 평화시기의 성격이 고조화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중요한 국제관계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전개되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마치 미국의 국가이익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일치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시기였다.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안보체제의 확립이라든가 국제관계의 다변화 등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외교관계에서 통상적인 공관의 개설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국가에 치중해 있었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외교의 전부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대미의존적인 성격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의 참화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반공에 대한 국민감정을 통해서, 사회의 안전이 지속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두번째의 시기로는 4월 혁명에서부터 60년대의 초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4·19혁명에 의하여 이승만의 하야를 가져왔으며,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민주당 신파가 집권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장면의 제2공화국이 보여준 친미주의적인 성격은 이미 그 자신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가 아니라 정권의 장악과 점유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 미국측의 지원과 영향력 하에서 장면 정권은 일본과의 국교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였다. 당시 장면의 대일관계 정상화의 노력은 자의적인 선택

의 성격보다는 미국의 대극동정책의 일환 속에서 빚어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5·16의 군부가 정치에 참여한 이후 박정희의 집권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는 역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일교섭이었다. 박정희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미국의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측면적인 지원, 그리고 60년 초기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계년 계획의 실천에 요구되는 발전자금의 문제 등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박정권의 존립에 따르는 당위적인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른바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 이완용을 자처했던 군부 정치 참여파의 몇몇 인사들이 일본을 내왕했으며 그 결과 「金·大平」 메모로서 한일회담의 타결이 원칙적으로 합의될 수 있었고 그 결과 1965년 6월에 한일문제가 타결될 수 있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의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당시의 상황은 국민들의, 특히 지식인과 학생들의 반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나타났으며 그 속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저돌적인 태협자세는 문제를 매듭을 지울 수 있었다. 이른바 박정권의 운명을 건 도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일 국교정상화는 국민의 거센 반대의 열기에 휩싸였다. 또한 1965년에는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됨으로써 1950년 6·25 전쟁 중에 각서 형식으로 맺어진 이른바 대전(大田)협정이 폐기될 수 있었다. 그 뒤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자유진영의 방위라는 명분으로 국군의 월남파병이 행해졌다.

이 시기까지의 모든 외교관계는 예의 없을 정도로 대미관계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월남파병만해도 비록 월남이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에 의해 고통받는 자유진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군의 파병은 최초의 대의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미 당시의 국제관계가 점점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제3세계의 비동맹 중립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는 수다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행해진 결정이라 할 때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미래적인 가능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일이었다.

박정희 초기 집권과정은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일충 더 긴밀히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특히 일본과의 오랜 한·일 정상화의 매듭을 풀었고 나아가서 월남의 파병을 통하여 국가안보체제의 확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의 기간은 주로 1970년대로서 그 중요한 사실은 남북의 통일을 위

한 남북적십자사 대표간의 회담을 들 수 있다. 분단 30년의 분단 과정 속에서 이질화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남·북이 비록 적십자사 대표간의 회담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회의를 열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민족 성원에게 더할 수 없는 기대감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도 역시 북괴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에 의해서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남북한의 회합이 비록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최초로 한국인 사이의 주체적인 노력과 의지에 의하여 통일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1910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외국지배의 참담함을 경험하였던 때로부터, 그뒤의 1945년 해방만 해도 민족의 주체적인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 쟁취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작전 계획의 일환으로 가져다 준 것이고 보면, 외국의 영향력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의지나 능력을 항상 압도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괴군의 남침 만해도 소련의 사회주의 팽창정책의 성격으로 자행된 것이었으며, 그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도움에 의하여 침략군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뒤의 안보의 중요한 방파제의 하나를 미국의 지원으로 메꾸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들이 마침내 남북한의 회담을 통하여 비로소 주체적인 의지가 표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는 미국의 카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른바 인권외교를 그들의 대외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도층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를 빚어내고 있었다. 박동선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코리아케이트」 사건은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을 필요로 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당시의 성격이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수혜자의 위치로 부터 동반자의 위치로 지향함에 따르는 현상으로서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밖에 없었다.

III.

한 세대 간의 국제관계와 안보문제는, 이미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국제적

인 영향력의 수용자적인 성격으로 점철되어 왔다. 국제관계가 한 세대를 지나오면서 이전의 적대세력이었던 미국과 중공이 서로 동맹국적인 협조관계로 변모하였으며 미국과 소련과의 동서 공존정책은 비록 상황에 따라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평화공존의 넓은 테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국제관계의 사각지대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라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1950년대적인 냉전체제의 구조 속에 놓여있다. 시대의 변모를 감지할 수 없는 굳어진 남북분단의 성격은 고착적인 상황으로 남아 있다. 오히려 고착적이라기 보다는 일층 더 악화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북괴의 간첩 남파와 도발은 때로는 청와대 기습사건을 저지르기도 했고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을 일으켰으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거쳐서 울진공비침투사건 그리고 최근의 땅굴사건에 이르기까지 간단없이 되풀이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에서나 또는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남북한이 서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노력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부터 중동에 이르는 조그만 하찮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외교공세로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세대 동안 우리의 국력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초기의 외교관계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몇몇 중요국에만 상주공관을 개설할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공산권을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 공관을 설치하였으며, 고작해야 일본 등지에 살고 있었던 교포를 제외하면 외국에서의 한국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는 5대 양 6대주에 한국인의 발자국이 닿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정부의 승인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의 근거로 삼았던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합법정부라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회원국가가 아니면서도 「유엔 테이」를 기념해왔던 넌센스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며 이제는 이른바 태평양시대의 주역의 한국가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모가 바로 우리 사회가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국제관계 속에 참여하면서, 나아가서는 분단고착의 민족적인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 속에서 안보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늘을 과연 「전시 상태가 끝나지 않는 일시적인 휴전하의 국민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참여국가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가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당위와 현실, 민족적 욕구와 현실적 정치상황 사이의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도 관점에 따라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는 안보의 정치적 전용에 따르는 문제이다. 특히 박정희 통치체제의 마지막의 시기에서 행해졌던 유신체제의 논리적 정당성은 바로 안보를 그 이유로 삼았다. 유신체제는 물론 박정희 통치의 지속화가 그 일차적인 이유였다. 경제발전을 지속화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될 수 있다. 사회적인 안정을 구축하여야 할 이유도 들 수 있다. 북괴의 도전과 남침 가능성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 중에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이 안보였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모든 사실이 박정희라는 특정인물의 권력의 지속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그 만큼 설득력을 상실하고 만다. 안보의 문제나 남북의 통일문제는 결단코 어느 특정 인물의 권력 장악이나 정권의 유지와 연결될 수 없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민족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가 정권적인 차원에서 논의됨으로써 안보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켰고 국민들 모두에게 현실성이 없는 마치 추상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말았다. 두번째의 이유로서는 민주주의적인 정치과정의 미확립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보에 대하여 깊이 있게 대처하고 전시하적인 상황을 실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의 위치를 가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폐쇄시켰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의 미확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당시 박정희 통치체제는 민주주의적인 정치과정에 의한 국민적인 욕구를 취합하면서 의회정치의 터전 위에 서서 외교문제의 매듭을 차근 차근히 설명하면서 민족의 이익과 명예로움을 간직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했다. 물론 외교정책이나 국제적인 문제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비밀주의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연극적인 통합과정에 의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했다. 스스로 이완용을 자처했던 인사들이 나서 야 했고 수다한 사람들의 반대의사를 강권적인 압력으로 억눌려야했던 당시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이 얼마나 한계지워져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외교정책에서나 국제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적인 정치과정이야말로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주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 줄 수 있다.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안보 문제가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밖에 없었다.

세째로, 안보와 국제문제에서의 주체적인 국민의식이 조성되지 않은 이유로서는 우리 사회의 지도계층의 생활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계층은 비단 정치계의 인사들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제계 문화계 등 각종 영역에서 지도계층에 속하는 인사들의 생활양식이나 자세가 안보와는, 특히 전시하적 생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할 것이다. 부정과 부패를 근절시키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정권을 장악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부정축재자로 재산이 환수되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예사로 「떡고물」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면서도 여전히 지도계층의 인사로 남아 있으며 반성과 책임을 결여하고 있는 이들의 생활자세 속에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안보의식의 당위성은 그 만큼 현실과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사이의 경제발전의 물량적 성장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도 형성되었고 기업가도 나타났다. 이들의 축재과정이나 기업활동에 따르는 문제는 그만두고서라도 이들 중 몇몇 인사들이 보여주는 실제 생활면에서의 생활태도는 「천박한 출부」 바로 그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재벌은 누구이며 기업가는 누구인가? 아마도 우리 사회 30년 사이에 가장 큰 비극의 하나는 “부러운 사람은 있어도 존경받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일 것이다. 존경받지 못한 태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회의 견전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가?

네째로,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가 전시적 상황 하에 있으면서도 점점 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유로서는, 아마도 오늘의 사회기풍과 문화구조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 저속한 소비문화가 판을 치고 천박한 미국의 코카콜라 문화가 거침없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의 아픔이 아무리 강조된다 해도 젊은 세대에게는 매력을 잃은 한담에 불

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작 발상한다는 것이 스승과 어린 제자가 한 자리에서 서양 신식춤이나 추는 계획만으로선 전전한 청소년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라디오에서 쏟아지는 어느 코메디안의 훌러간 옛노래의 가락속에 묻혀 나오는 어설픈 반공 방첩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호화로운 상류가정을 「보통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방영하고 있는 국영 텔레비전의 화면 속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속하다는 평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른바 개그맨이라는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방영시간을 침식하고 있을 때 사회의 전전한 기풍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전쟁을 잊고 살아갈 수는 있어도 전쟁 그 자체는 없앨 수 없듯이, 아무리 우리가 30년 전의 전쟁이라고 규정해 버리려 해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북괴의 전쟁적 도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다. 국제관계에서 마치 영원한 우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이 잘못인 것처럼 주체적인 한국인다움의 의지야말로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국제관계의 논리를 현실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과정에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하고 과정이 있어야 하며 호혜적인 태도가 따라야 할 것이다. 「무찌르자 중공군 몇백만이냐」고 노래불렀던 우리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 기억을 잠재울 수 있는 조처가 합리적으로 따라야 비로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다는 국제관계의 논리에 실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와 국제관계의 한 세대를 돌아보면서 굴절된 우리의 의식이나, 신산한 경험 속에서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지난 날의 기억이 결코 헛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특히 30년 전 그 때나 지금이나 전쟁적 상황은 전혀 달라짐이 없는, 아니, 오히려 일층 더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완전히 달라진 사회적 기풍 속에서 주체적인 한국인다움을 구축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모두가 진심으로 전쟁적 상황하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있게 느끼고 생활하면서, 한반도 북쪽을 강점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 궁극적으로는 민족사의 가장 큰 도전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때, 비록

우방의 우정어린 충고라 할지라도 국내 문제를 거론하는 비외교적인 우방의 어느 대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논박할 수 있는 민족적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